

关于日韩文化交流的今日的课题

——以对“教科书”问题的思考为中心

日本广岛大学 今中比吕志

文部科学省在过去的4月3日，发表了预定在2002年开始使用的中小学教材的审查结果。其中也包括着得到137处修正的被判定为合格的“新历史教科书编纂会”主导的历史教科书（扶桑社）。与东大藤冈信生教授们一起自称是主张“新自由主义史观”的编纂会的西尾会长，把出版现行的新历史教科书的其他7家出版社批评为“与自虐本并无差异”（《朝日》4月22日）。他把现行的历史教科书说成是“自虐史观”、“反日的”。“编纂会”以各种形式活动与具有教科书采纳权限的全国市町村教育委员会，请愿该委员会能否改编采纳方法，使“编纂会”的历史教科书容易被采纳。这种请愿到4月10日为止，在33个道县、222个市区町村议随即被采纳，其采纳数也正在急增。

另一方面，“编纂会”的历史教科书因隐蔽、歪曲、美化战前日本军国主义的亚洲侵略战争和殖民统治而正受到来自国内外的严厉批评。在国内历史关系8学会发表了“反对《新历史教科书编纂会》的历史教科书的声明”（3月13日），而且大江健三郎、井手孙六、井上等17名学者、文化人也发表了“忧虑历史教科书的后退、向政府要求”（3月16日）的声明。尤其是和田春树等历史学者从被认定为合格历史教科书当中找出了51处错误的地方。在国外，韩国政府向日本政府提出35项修正要求（5月8日）、中国政府向日本政府提出了8项修正要求（5月16日），“教科书”问题发展成为了日本同韩、中间的外交问题。韩国外交通商部长官5月26日在北京见到田中外相时表示“要进行看得见的对应”。

面对这样的国内外形势，以小泉纯一郎为首的政府首脑表示历史教科书不能修改。同时，远山文部科学相在众院预算委员会的答辩中称“被鉴定的历史

教科书的历史观并不代表政府的想法”。但是，这些一系列政府的回答，并不是负责任的回应，而是一种对国内外的批评和修正要求的简单答复。

象征历史教科书问题的日本“右倾化”倾向，与日本的丸、君的代法制化及强制等诸问题，日本国民以天皇为中心的“神国”理念、统一思想，都起了强化暗堡体制思想基础的作用。但是，战前思想上支持军国主义的深化和教育敕语，被经历战后50年以上的民主主义历史的日本国民不会轻易接受。与日本军国主义侵略战争和殖民统治时期遭受痛苦的亚洲各国人民一起，阻止日本当前的“右倾化”倾向，为了拥护和平与民主主义而进行的时刻已到。

일한 문화교류에 관한 오늘의 문제(요약문)

--“교과서” 문제를 고려한다--

今中比呂志

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3일, 2002년부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는 137 곳의 수정을 거쳐 합격이라고 판정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회장은 西尾乾二임)에서 주도한 역사교과서(扶桑社)도 포함되어 있다. 東京大 藤岡信勝 교수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사관”을 자칭하는 西尾 회장은 이때까지의 역사교과서를 “자학 사관”, “반일적”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은폐·외곡·미화한다고 국내의로부터 엄하게 비판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사관계 8학회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3월 13일)을 발표하는 등 많은 학자·문화인들이 비판을 진행했다. 국외에서는 한국정부가 35항목에 달하는 수정요구(5월 8일), 중국 정부가 8항목의 수정요구(5월 16일)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교과서” 문제는 일본과 한·중간의 외교문제로 발전하였다. 5월 26일 한국 외교통산부장관은 북경에서 일본 田中 외상에게 “눈에 뜨이는 대응”을 요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외의 동향에 대하여 小泉純一郎 수상을 비롯한 정부 수뇌들은 “모임”의 역사교과서는 “수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1990년대 이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의해 상징되는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 및 강요 등 문제와 함께, 일본 국민의 사상을 천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일하여 안보체제의 사상적 기초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전의 일본 군국주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신화나 교육칙어가 전후 50년 이상의 민주주의 역사적 경험을 거친 일본 국민에게 수월하게 수용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해 큰 손해와 고통을 경험한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과 공동으로, 일본이 당면한 “우경화” 경향을 저지하고 평화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